



우리 나라 대학 재정 실태와 건실화 전략

김 석 현 |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I. 대학 수요의 환경 변화

지난 17~18세기 증기 기관차 발명으로 시작된 제 1차 산업 혁명은 그전 8,000년 동안 인류의 주산업이었던 농업 시대의 종막을 고했다. 그후 전화, 라디오, 전기, 철도로 대표되는 제 2차 산업 혁명은 일상 생활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국가 경제로 전환시켰으며, 마이크로 전자 공학, 컴퓨터, 로봇 산업, 정보 통신, 유전자 공학 등에 의한 제 3의 산업 혁명은 지식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 기반 사회를 형성하면서 과거 토지나 금, 원유를 소유하고 있거나 특허조차 없던 대량 해고를 맞고 있는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생존 번영을 위한 중요 자산이 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고부가 지식 창출의 본산이요, 국가 경쟁력의 첨병인 대학 교육을 개혁하고 질을 제고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면에서 볼 때 우선 순위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II. 대학 재정 확보의 중요성

대학 재정이란 일반적으로 국고 지원, 등록금, 단체

또는 개인 기부금, 자체 수익 사업 이익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대학 운영에 필요한 부문에 지출하는 제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 재정의 의미를 단순한 대학 운영 활동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수요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의미로 모아지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와 디지털 혁명, 그리고 새로운 고용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다양성 신장과 창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교육의 체제가 크게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대학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위기 의식과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하며, 대학 스스로 정부 통제에서 독립하여 지식의 핵심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시장 요구에 쉽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전제되어 충분한 대학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행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학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엇보다도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표 1〉 2000년도 4년제 대학 재정 국고 지원 규모

(단위 : 조 원)

GDP(A)	정부 예산	타 부처 포함 교육 예산(B)	대학 지원 예산(C)			C/A	C/B
			국·공립	사립	계		
522.48	93.93	22.79	1.96	0.31	2.27	0.43%	9.9%

〈표 2〉 4년제 사립 대학의 운영 수입 구조

('99년도 결산, 단위 : 억 원)

등록금	전입금	기부금	국고 보조금	교육 부대 수입	교육외 수입 등	계
44,007 (68.1%)	6,368 (9.9%)	5,888 (9.1%)	3,051 (4.7%)	1,385 (2.2%)	3,878 (6.0%)	64,577 (100.0%)

〈표 3〉 국·공립 대학 재정 규모

(2000년도 예산 기준, 단위 : 억 원)

재원(A)			학생 부담액(B)			비 고
국고 지원	기성회계	계	수업료	기성회비	계	
19,600	7,321	26,921	1,472	5,358	6,830	국고 지원율 : 72.8% 등록금 의존율 : 25.4%

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 경제 사정이 세계 경제의 국가간 경쟁력 심화, 고유가와 지역 분쟁, 금융 위기, 세계 경제의 젖줄인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대학 재정의 건실화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만, 대학간 경쟁력은 바로 재정의 건실화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Ⅲ. 대학 재정 실태

해방 당시 1개 대학으로 시작한 우리 나라 고등 교육 기관은 현재 4년제 192개교, 2~3년제 161개교로 그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등 교육 예산은 10년 전인 1990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볼 때 양적 증가에 따라 GDP 대비 0.30%에서 0.43%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학생 취업률이나 1인당 시설 규모는 오히려 감소되는 등 교육 여건과 질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표 1〉과 같이 전체 교육 재정 대비 대학 지원 예산이

9.9%를 점하고 있어 학생 수 비율 16.6%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 40.2%('87), 일본 22.5%('88), 대만 17.6%('96)에 비해서도 월등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GDP(522.48조) 대비 대학 지원 예산 비율은 0.43%로서 핀란드 1.7%, 호주 1.2%, 미국 1.1% 등 OECD 국가의 평균인 1.0%의 절반 수준이며, 우리 보다 저개발국인 말레이시아 1.1%, 태국 0.7%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4년제 사립 대학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액을 보면 국·사립 대학 전체 학생 수 대비 사립 대학 학생 수가 7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표 2〉에서 보듯이 사립 대학에 대한 정부 국고 지원액은 연간 3,051억 원 규모이다. 이는 사립 대학 운영 수입 총 규모(6조 4,577억 원)의 4.7%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써 미국의 경우 국고 지원율이 대학 운영 수입의 19%, 영국은 35%, 일본은 13.3%를 차지하고 있음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있다.

국·공립 대학교의 경우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표 3〉에서 보듯이 국·공립 대학의 국고 지원율 72.8%에 비해 사립 대학의 국고 지원율은 너무나 많은 격

〈표 4〉 사립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 현황 (2000년 3월 현재, 단위 : 억 원)

구 분	기준액(A)	보유액(B)	과부족액(B-A)	확보율(B/A × 100)
일반 대학	54,549	26,024	-28,525	48%
각종 학교	35	9	-26	25%
산업 대학	3,048	1,964	-1,084	64%
대학원 대학	96	307	211	319%
총 계	57,728	28,304	-29,424	49%

〈표 5〉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 현황 (2000년 3월 현재, 단위 : 억 원)

구 분	토 지	임 야	건 물	주 식	예 금	기 타	계
평가액(비율)	12,467(44%)	4,508(16%)	4,531(16%)	1,580(5%)	4,734(17%)	484(2%)	28,304(100%)
수익액	75	1	400	39	494	1,257	2,268
수익률(%)	0.6%	0.0%	8.8%	2.5%	10.4%	260.1%	8.0%

〈표 6〉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율별 대학 현황 (2000년 3월 현재, 단위 : 교)

보유율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계
대학 수	47	9	9	17	21	64	167
비 율	28%	5%	5%	10%	13%	39%	100%

〈표 7〉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금 학교비 부담 내역 (2000년 3월 1일 기준, 단위 : 억 원)

구 분	총수입(①)	총비용(②)	수익금 (A=①-②)	학교 운영 경비 부담 내역			
				기준액 (B=A × 80%)	부담액(C)	과부족(C-B)	부담률(C/A)
총 계	2,268	915	1,353	1,117	996	-121	74%

차가 있으며, 등록금 의존율도 국·공립 대학의 경우 25.4%에 불과한데 비해 사립 대학은 68.1%로써 공평한 경쟁적 분위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면 일본 10.2%, 대만 14.2%, 싱가포르 16.8% 미국 31.9%로서 우리 사학이 거의 2~6배 수준으로 제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제정 이외에도 〈표 4〉와 같이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액은 2조 8,304억 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은 49%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학 유형별로는 대학원 대학 319%, 산업 대학 64%, 일반 대학 48%, 각종 학교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표 5〉와 같이 총 수익 재산의 60%가 비수익성인 토지 및 임야로서 수익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수익 재산의 수익률은 8.0%에 불과하여 대학 자체 수익 재산 구조상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어 고수익성 재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대학별로 법정 기준 대비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율을 보면 〈표 6〉에서와 같이 100% 이상 확보한 대학은 전체 167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47개교이며, 나머지 72%에 해당하는 120개교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 7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연간 대학 회계 운영 수익 총액:100%)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 재산의 사립 대학 제정 기여도

〈표 8〉 사립 대학의 적립금, 이월금, 부채 현황 (’99년도 결산, 단위: 억 원)

적립금						이월금	부채
건축	장학	연구	퇴직	기타	계		
10,357	1,447	2,416	398	11,592	26,210	8,284	34,107

〈표 9〉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 비교 (’95년도 기준, 단위: US\$)

한국	미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일본	프랑스	OECD 평균
5,204	16,262	13,168	11,471	10,590	8,768	6,569	10,444

* 자료: OECD(1998),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2000년도 전체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발생 수익 중 학교 운영 경비 부담액은 996억 원으로 수익금 대비 부담률은 7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익용 기본 재산 수익 중 80% 이상을 학교 운영 경비로 부담한 대학 법인은 전체 167개교 중 54%에 해당하는 91개교이며, 나머지 46%에 달하는 76개교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부담률(80%)을 미준수하고 있다.

’99 회계 연도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표 8〉과 같이 전 사립 대학의 이월 적립금 총액 약 3조 4,494억 중 이월금은 약 8,284억이며, 적립금은 약 2조 6,210억 원이나 이 중 대부분은 대학의 내실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반드시 그 목적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기금 성격으로서 외국의 하버드 대학 14조 7천억 원, 텍사스 대학 8조 7천억 원, 예일 대학 7조 5천억 원 등 외국의 1개 대학에도 못미치는 과소한 편이다.

또한 이월금은 부득이 당해 연도에 지급되지 못하고 차기 회계 연도로 이월하게 된 금액으로 유용 또는 재정이 넉넉하여 남긴 것이 아니며, 적립금이 있으면서도 기체를 하는 것은 동일한 법인 내에서도 회계와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학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

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표 9〉에서와 같이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국고 지원이 미흡하고, 민간 재원 유치도 쉽지 않아 거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지방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 여건은 점점 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 교육 재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대학 지원 예산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지식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 예산 100.2조 원 중 교육 관련 예산이 23조 4,954억 원(지방세 포함)으로 가장 많이 계상해 놓고 있으나, 지난 연말에 개정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률의 인상(내국세 총액의 11.8%→13%)으로 지방 교육 재정 예산이 대략 3.6조 원 규모 정도가 증액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의 재원 마련 때문에 대학 재정을 증액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럼으로써 지방세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순수한 교육 예산은 총 20.0188조 원이며, 이 중 초·중등 교육비가 16.8245조 원이고, 나머지 3.1943조

가 교육부 본부 사업비와 대학 재정 지원비로서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대학 재정의 건설화 전략

대학 재정의 건설화를 위해선 국고 예산을 증액하고 자체 조달 방안을 극대화하여야 하는데, 국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대학 재정을 확보해 주고 대학 자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세계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대학은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대학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운용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선 국가 주도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면서 학교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 민간 기구인 대학 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지원하거나 또는 대학 체제를 완전 자율화하고 기업화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지원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외국과 같이 사립 대학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학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지나친 경쟁과 일부 대학의 독점으로 대다수 후발 또는 지방 대학들은 학생들도 외면하여 이로 인한 공동화와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사실 정부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인 간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만을 마련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 또한 머지않아 교육 산업 개방으로 외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물밀 듯 밀려올 경우 정부 주도의 교육과 인적 자원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교육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대학과의 장벽을 무너뜨리

고 앞에서 이끌어 주고 상호 작용을 강화해 주는 역할로 그쳐야 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 교육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에도 지식 축적에 실패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지식 축적 사업에 중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이 독립적으로 생성될 수 없고 자신의 분야에만 국한하여 박식하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꾸준한 학습을 통해 다양하게 창조적 지식으로 중무장해야 하며,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지식을 공유 활용해야 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학교 조직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정책

교육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 재정 지원액 확대 노력

국가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교육 재정 대비 대학 재정 비율을 9.9%에서 최소한 대학생 수 비율만큼 26.6%로 확보하고, 사립 대학의 국고 지원을 운영 수입 대비 4.7%에서 장기적으로 10% 이상 되도록 확대하는 등 대학 재정 지원의 총량 규모를 늘리고 국·사립간 격차도 줄여 나갈 것이다.

두 번째, 대학 지원 예산 구조의 합리적 개선

현행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그 동안 일관성 없이 수시로 계상되어 설립별(국·공·사립), 목적별(일반 지원과 특수 목적 지원), 계열별(자연계와 인문계), 대학 정책 사업별, 지역별(수도권과 지방 등)로 형평성이 결여되었기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우수 고등 인력 양성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예산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 구조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대학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및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예산 지원 방식의 개선

대학별 사정에 따라 수도권 소재 또는 우수 대학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고, 지방 소재 대학이나 영세 대학은 조건 없이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없이 균일하게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에서는 성과주의 원칙에 입각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한다. 다만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되,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고 일반 지원과 목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평가하고, 통제를 위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조성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으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측정 단위와 단가를 적용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아울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대학 지원 방식을 연구하여 우리 대학 실정에 알맞는 재정 지원 체제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겠다.

네 번째, 국립 대학 특별 회계 제도 도입

현행 경직된 일반 회계 제도는 대학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제약함으로써 창의적인 대학 운영을 저해하고 있고,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의 이원적인 운영으로 효율성과 책무성이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이 검토되고 있는 회계 특례 제도는 관련 부처간에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재정 지원 규모를 과년도 수준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는 대학별 총액 예산만을 편성하고, 대학의 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 행정 체제와 교직원 T/O를 정하

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을 자율 편성하도록 하며, 일정액을 초과하는 등록금과 초과 수입금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자율 사용하도록 하고, 기부금 등을 적립하도록 하며,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등으로 대학 입장을 가급적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계 부처에서는 성과 예산주의와 공공 기관의 복식 부기 시행 검토 후에 시행해 줄 것과 등록금 자율화 문제는 곤란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시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다섯 번째, 대학 자체 수익 사업 지원 확대

대학에서도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다양한 수익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벤처 자금 2조 원의 프로젝트를 대학에서 대량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 벤처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학교 내의 풍부한 신기술과 지식 정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재정 수입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산업체와의 제휴 전략 등으로 민간 기부금을 증대하도록 하고, 학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대학 시설을 임차 활용한다든가, 정부, 기업체, 공공 및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수탁 받아 연구비와 간접 연구비를 증대하는 등의 자구적 노력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사학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사학이 정부를 대신하여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계상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른 비영리 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개선해 주어 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도모해 주어야 한다.

금년도에 다행스럽게도 개인이 사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 10%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소득세를 전액 소득 공제하는 소득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에 이

미 공포 시행된 바 있으며, 사학이 운영하는 수익 사업의 주식을 5%만 소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소유 주식 시가의 5%씩 모두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증여세) 문제, 기본 재산 양도 시의 양도세 면세 기한의 연장 문제 등은 관계 부처와 개정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국회의 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학 법인을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에서 분리하여 제 3의 특수 법인으로 인정하여 공립 학교와 동등한 세계상 혜택이 되도록 하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며, 교통 유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전기 요금을 산업용 수준의 요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재무 회계 구조 개선 및 경영 합리화 유도

행정 사무의 표준화와 조직의 슬림화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 나가며, 비용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소모적인 경비를 절감하며,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제거해 나가고, 예산은 전년도 답습의 기계적인 편성이 아니라 영기준으로 하여 교육 목표와 계획에 적절하도록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 번째, 사립 대학의 간단한 경영 분석 자체적 실시토록 지원

대학생의 감소로 사학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사학 기관들이 재정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자체 분석하여 파산, 도산의 우려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학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경영 분석 모형을 개발, 사립 대학에 제시하여 대학별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총 30개 지표로 하여 그 방법은 지표 비교법을 사용하고, 비교 유형은 학생 규모(4개군), 재산 규모(3개군), 소재지별(3개군), 설치 계열별(3개군)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시하여 지표별로 대학 유형에 맞는 당해 대학의 평점을 스스로 산출하여 다른 대학들과 영역별 지표 비교를 통한 전반적인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측정하여 당해 대학의 제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상대적 비교 순위 및 수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취약 영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시된 분석 모형은 '96년, '97년, '98년 3개년의 누적된 결산 자료에 의한 것으로 향후 2년간의 시험 적용을 거쳐 최소한 5년간의 누적된 분석 모형과 시험 적용 중 분석 모형에 대한 개선·보완을 통하여 2002년부터 동 제도를 정착화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아홉 번째,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토록 하고, 등록금 책정 시에도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학내 구성원간 합의를 도출하여, 사학의 토착적인 비리와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만성적인 사학의 부실화에서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학 비리 방지를 위해 「사립 학교법 개정과 비리 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는 사학의 공공 자산화, 설립·운영의 자격 제한, 공익 이사제 도입, 임원 취임 취소 사유 강화, 교수 회의 의결 기구화, 교원 면직 사유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국회 교육위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입법으로 사립 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 번째, 사학의 내·외부 감사제 실효성 확보

사학의 재정 관련 부조리 부정 등이 일부 학교에 국한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내 분위가 야기되고, 이에 따라 교육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사학에 대한 신뢰성 및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어, 현행 내·외부 감사제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여 재정 운용 및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내·외부 감사제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무·회계와 관련 부정 탈법 등 현저히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였거나 민원 야기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의 비리 발생 여부를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에서 외부 감사 실시 여부를 정하여 외부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형식적이던 외부 감사의 세부 준거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내부 감사(법인 감사)의 임기 조정과 이사회 참석의 통지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서명 날인을 의무화하는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법령의 제 개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01학년도(2000 회계 연도 결산)부터 적용함으로써 사학 기관의 재정 회계 관련 각종 비리를 제거하여 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열 한 번째, 사학 기관 예·결산 공개 추진 확대

사학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에도 대학의 예·결산을 대학 신문 등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예·결산서의 경우 모든 대학 내 회계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 재무 제표의 내용과 세부 항목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며, 자율 공개 시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여 적극 공개를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열 두 번째, 재정 지원 위한 평가 제도 개선

금년도에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평가 제도의 체제 및 방법을 개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가 제도를 개선 시행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별 다원화된 평가 체제를 통합하여 일반 지원 사업과 특수 목적 사업으로 나누어 총 10개 사업(4,564억 원) 중 5개 사업(국립 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사업, 공·사립 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대학 다양화·특성화 기반 조성 사업, 우수 산업 대학 지원 사업, 이공계 우수 연구소 지원 사업 총 2,014억 원)은 공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 지표를 정량적 지표에서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 성과 위주의 질적인 평가 지표를 반영하였고, 사업별 목적 지표 외에 공통 지표를 개발·활용함으로써 대학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각 대학이 지향하는 유형(교육, 연구, 병행)에 따라 해당 평가 영역의 비중 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유형별 특성화를 유도하였고, 이외 학생 비중치의 하향 조정으로 부익부 빈익빈 편중 지원을 지양하였다.

향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더욱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일관성 있으면서도 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학의 평가 부담을 더욱 경감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종료 후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책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평가 계획에 환류 반영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평가 체제를 구축해 갈 계획이다.

열 세 번째, 등록금 책정의 합리화 도모

매년 반복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따른 대학가의 마찰을 해소하고 학문 탐구에 정진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재정적인 확대 노력과 함께 경비 절감으로 인상 요인을 억제하되 등

록금 인상 근거를 명확히 산출토록 하여 학내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공개하며, 입학 요강에 명시하는 등 등록금을 사전 예고하고 납부 연기 및 분납제 시행, 장학금과 융자금의 확대, 학생 복지 시설의 확충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교육부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범정부적이고 초당적인 지원과 전체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열 네 번째, 사학 진흥과 지도 감독 부서 단일화

현재 사학의 설치 및 폐지와 법인의 지도 감독은 대학 행정 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사학의 재무 회계 지도와 재정 및 재산 관련 허가 및 재정 비리 업무는 대학 재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원화 체제로 사학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

었으나, 앞으로 교육 인적 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사학 업무를 동일한 과에서 통합 관장할 계획이다.

일본 문부성에도 사학 진흥과에서 사학을 관장하듯이 우리도 사학에 대한 진흥과 지도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일사 분란한 사학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끝**

김석현

동국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대학학무과, 전문대학학무과, 교육행정과, 총무과 등을 거쳐 군산대 총무과장, 재외동포교육담당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학재정과장으로 재직중이다. 논문으로 '교원 양성 제도의 고찰과 개선 방안', '조직간 네트워크 체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대학 시설의 발전 방안', '대학 재정 지원 정책 방향', '사학 법인 세제 감면 확대 추진 방향' 등 다수가 있다.